

# 노동자의 구매력과 특별소비세 인하



이상학

연주노동 사무국장

정부는 심각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전제품, 식품,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휘발유세 등은 인상하는 한편 특소세를 인하하여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한다. 기존에 10~20%이던 특소세를 품목별로 30% 인하하여 내수시장에서의 구매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 조세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특별소비세는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 등 투전기와 오락용 사형기구에도 부과되고 있지만 냉장고와 세탁기, 전열기구

는 물론이고 청량음료와 사탕 등 식품에도 부과되고 있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요 품목이 승용차,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청량음료 등 일반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품목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특별소비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서민들의 일상 생활용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가전제품 등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낮춘 것은 특소세의 취지와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내수를 부추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현 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특소세의 부분 하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게 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실물경제의 급격한 붕괴

IMF의 초긴축 정책으로 내수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실물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수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내수용기계류 출하는 58.4%가 감소하여 내수시장의 설비투자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1998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4월에는 -12.7%를 나타냈다. 뿐만아니라 내수용 소비재출

하도 -24.4%로 급락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는 물론이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으며, 향후 소비의욕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내수위축 상태에서 특별소비세의 인하가 어느 정도 수요를 자극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불황은 구조적인 불황으로 일부에서는 공황의 가능성을 짐치기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98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하여 1980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와 소비가 모두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의하면 1998년 1/4분기 중 최종 소비지출은 9.5% 하락하였다. 최종소비지

[표 1] 주요 실물경제 동향

연 도	1997			1998				
	3/4	4/4	연간	1월	2월	3월	4월	1~4월
제조업생산	8.8	5.3	6.7	-11.3	-1.9	-10.4	-11.1	-8.9
평균가동률(계절조정)	80.6	78.0	79.9	67.8	68.8	65.4	68.3	67.6
소매판매	5.6	0.3	4.5	-8.8	-10.8	-10.0	-12.7	-10.6
내수용소비재출하	2.7	-4.3	-1.5	-18.5	-18.4	-22.0	-24.4	-20.9
기계류 내수출하	2.9	-10.8	0.8	-32.8	-30.6	-40.6	-42.8	-37.3
내수용기계류수입	-30.0	-36.5	-23.3	-58.2	-53.3	-57.6	-58.6	-57.0
건축허가면적	-15.1	12.1	-0.4	-16.8	-7.3	-38.6	-58.1	-33.8
국내건설수주	-4.3	-17.8	4.7	-19.3	-19.9	-29.6	-58.6	-34.7

출 중에서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하는 등 소비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 실업률 증대와 실질임금 하락

소비의 위축은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며 일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율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이라도 1998년 4월 현재 실업률은 6.7%로 실업자수가 140만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의 자체 집계 따르면 실업률은 16%, 실업자수는 360만에 달한다.<sup>1)</sup>

그리고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임금의 정체 속에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1998년 1/4분기의 경우 명목임금인상율은 0.1%로 거의 정체 상태에 있으나 소비자 물가가 8.9% 상승하였다. 명목임금 정체 속에서 높은 물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하락시켜 8.1%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의 중요한 정책방침인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다. 통화긴축정책은 시중의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금의 부족으로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업의 조업중단은 노동자의 해고와 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정긴축으로 정부의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건설시장을 비롯한 내수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초래한 물가상승은 실

[표 2] 임금관련 주요 동향(비농전산업)

연 도	1995	1996	1997	1997				1998
				1/4	2/4	3/4	4/4	1/4
임금총액(천원/월)	1,222	1,368	1,463	1,430	1,401	1,543	1,480	1,431
명목임금증감율(%)	11.2	11.9	7.0	11.6	9.7	6.8	0.9	0.1
소비자물가증감율(%)	4.5	4.9	4.5	4.7	4.0	4.0	3.2	8.9
실질임금증감율(%)	6.4	6.7	2.4	6.6	5.5	2.7	-4.0	-8.1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종

1) 민주노총이 낸 「정부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통계는 불황으로 엄청난 규모로 존재하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보지 않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66.2만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경제활동인구화한 59.7만 명은 완전한 실망실업자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무급가족종사자화한 30.2만명 은 추가적인 실업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건설일용직 가운데 95.7만의 완전실업자가 있다.

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질소득 감소는 구매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구매력 감소에서 야기된 생산위축은 또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 때론 버는 부유층

소비자들은 기본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노숙자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결식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는<sup>2)</sup>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추가 소비지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IMF 이후 엄청난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14%대로 많이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지난해 연말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던 특수계층이 있었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현재와 같은 불황 속에서도 고급수입층의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F를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고 있다.

### 고용세 도입과 조세제도 전면 개편

IMF의 초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어려워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민주노총은 목적세인 고용세 도입은 물론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세를 도입하여 실업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그 하나이다. 특히 금융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 재원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과 실업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계개편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효과를 들 수 있다. 소득 재분배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구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저소득층과 구매력이 급격히 줄어든 계층에 실업부조와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지원을 하면 이들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매기더라도 국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제도의 개편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사회적인 효과가 있다. 높

2) 96년 3월 현재 서울 시내 초중학생 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4,284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0,67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한달 사이에 결식어린이가 60% 증가하였다. (『국민일보』, 1998.6)

은 실업률과 빈부격차의 확대로 야기된 사회갈등과 사회적인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많은 실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IMF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 안정은 심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간접세가 그러하듯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전가시키는 소비세인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율의 부분 인하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

상은 현 경제위기를 지나치게 인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소비세의 인하와 함께 세제에 대한 개편이 단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980년대의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상실의 시대'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재벌과 일부 계층의 이익을 지키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수적인 시장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서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개혁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제도의 획기적인 개편도 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